

국세청·공정위 동시다발 압박, 최윤범 회장 사법리스크 재점화 (*'thebell'*, 2026-06-16)

국세청 조사 4 국, 내사 완료 후 현장조사 전환...공정위, 순환출자 혐의 제재 착수

고설봉 기자 | 입력 2026-06-16 11:42:1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사정 당국의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전방위로 최 회장과 고려아연의 여러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막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MBK·영풍 연합에 2년 연속 판정승을 이끌며 공고한 리더십을 세웠다. 그러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최 회장을 중심으로 응축돼 있던 우호지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저승사자’ 서울청 조사 4 국, 최 회장 일가 정조준

16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 국은 최근 최 회장 일가 및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최 회장 등 사주일가 및 고려아연의 5000 억원대 불법 자금 유출 및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수사란 뒷말이 나온다.

이번 최 회장 일가 및 고려아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서울청 조사 4 국은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특수 조직이다. 검찰의 수사방식과 똑같이 수개월간 내사를 거친 뒤 혐의점이 분명해질 경우 현장조사에 나선다.

통상 서울청 조사 4 국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전방위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법이 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질문조사권과 장부 등의 예치,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회사의 거의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4 국은 수개월간 내사를 거친 뒤 확실한 혐의점이 확인됐을 때 현장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회사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압수해온다”며 “이번 고려아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에선 최 회장 일가 및 고려아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일각락된 상황에서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최 회장 일가 및 고려아연에 대한 여러 불법적 요소들을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3 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에 판정승했다. 지난해 상호주 제한으로 MBK·영풍 측은 보유 지분 100%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호주 제한이 없었지만 MBK·영풍 측이 표대결에서 패했다. 시장에서선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굳히고 주도권을 잡았단 해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이 소강기로 접어든 시점에 국세청이 전방위로 최 회장 일가 및 고려아연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조사의 강도가 쉐 될 것이란 신호로 읽힌다. 국세청이 여러 정무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원칙대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이다. 위법사안에 대해 확실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이 첨예하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 조사를 들어가면 정부와 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위법사안이 있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제 상황이 어느정도 일단락 돼서 내사를 종료하고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 당국 전방위 압박, 최 회장 사법리스크 불거지나

사정 당국이 잇달아 최 회장 일가 및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최 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세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고려아연이 해외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 회장 측은 2024 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계열사를 동원해 고려아연의 상호주 카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는데 공정위는 이를 문제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 순환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해외계열사로 우회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위 해석에 따라 강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경우 최 회장은 최악의 경우 CEO 및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는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연이은 사정 당국의 압박으로 최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제재를 받을 경우 경영권 행사 등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 한발 물러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MBK·영풍 연합이 공격의 빌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MBK·영풍 연합은 추가적인 법적 공방 및 주주들을 대상으로 표 결집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기관투자자(국민연금 등) 및 소액주주들을 설득할 명분도 생기게 되는 만큼 주총 표대결은 한층 과열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 4국은 총수가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곳”이라며 “기업의 오너리스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 회장 등에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작년부터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다”며 “이제 고려아연 차례가 된 것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통상적인 조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